

2010년 대전광역시 예산토론회

# 시민이 행복한 대전시의 예산은 무엇인가?

■ 일시 : 2009년 12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대 전 예 산 네 트 워 크

6.15공동위 대전충남본부 대전6.15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여민회 대전  
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  
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교조대전  
지부 진보신당 대전시당 청소년경제교육원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이상 19개 단체)

## = 진행순서 =

사회 :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주제발제 1.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 론 **강철식**(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주제발제 2. 2010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이찬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토 론 **한춘수**(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

전체토론

**김남숙**(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김형렬**(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 간사)

---

주제발제 1.

#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발제 : 김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 I.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 5,770여억원의 부동산교부금이 감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등 향후 4년간 지방재정 부족분은 전국적으로 65조 2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 등의 무리한 재정운영은 사회복지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현재 대전광역시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을 통해 예산편성 실태와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전체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모두 행복한 대전을 지향하는 자치시정의 철학과 의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비등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실질적 재정여력 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토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II.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위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감세정책이며, 감세정책의 주요내용은 종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또는 소폭 인하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거할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총 96조1천억원

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1>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규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감세규모(조)	6.2	13.5	24.6	26.0	25.8	96.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서민중산층에게 더 많은 감면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 무엇보다도 종부세나 법인세의 경우 결국 부유층으로 그 혜택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각종 감세정책이 구현된다면 결국 국가 재정운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정부 의존율이 큰 지방정부 재정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 2008년도 자체수입은 1조8,406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인 2조 9,814억원보다 1조 1,408억원 적으며, 반대로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8,961억원으로 대전시 살림규모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2009년 지방재정공시 내용>

의존재원이 대부분 복지, SOC 등 대전시 주요시책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인해서 줄어드는 세원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최근 대전시를 비롯해 5개구청, 교육청까지 추경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급약처방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동안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 Ⅲ. 각 국실별 및 분야별 예산분석

#### 1. 복지여성국 분야

정부와 사회복지계간에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정부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을 편성(09년도 대비 6.4조 증액, 역대 최고의 27.8%라는 복지예산비중)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최고 복지예산비중은 세수감소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하고,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10.1%에 턱없이 모자라는 8.5% 증가율, 증액금액 총 6.4조원 가운

데 보금자리주택 및 각종 사회보험 등 경직성 예산이 5조6천억원에 달해 복지예산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감액예산 편성했다. 추경포함 09년도 19조7천억원에서 1.5% 감소된 절대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다. 특히,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 스스로 2008년도 경제위기 촉발 이전 시점에 이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410만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삭감(09년도 기초보장 예산 대비 8.5%인 6,802억원)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시생계구호 및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세 항목의 경우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하 지방세수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편성 실태는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다. 당장 2009년도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이 10조9천억원에 달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사회복지분야 예산감소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와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사회복지재정 격차가 커지게 되고, 각종 경직성경비의 감소내지 동결은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여성복지국 예산에 대한 실태와 세부분야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지여성국 예산이 다른 분야대비 방대하여 관련 분야별 예산분석은 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운용 변화는 곧바로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의 감소내지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

2010년 대전시 총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총 61개사업 15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1개 분야 삭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비지원에 대한 삭감이 결국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대전광역시 2010년도 여성복지국 예산안

<단위 / 천원, %>

위원회별	2010년	2009년	비교△증감	증감률
계	582,228,145	500,704,720	81,523,425	16.28
		602,182,841 (2차추경포함)	△19,954,696	△
복지정책과	181,287,476	176,350,450	4,937,026	2.80
여성가족청소년과	174,212,342	123,513,094	50,699,248	41.05
노인복지과	123,709,513	116,849,431	9,860,082	8.44
장애인복지과	64,913,041	53,187,951	11,625,090	21.86
보건위생과	90,800,334	27,188,256	3,612,078	13.29
평생교육문화센터	4,405,439	3,615,538	789,901	21.85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을 놓고 비교할 때 16.28%라는 많은 증가율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가야할 부분은 추경부분은 항상 뺀 채 증가율만 생색낸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예산중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1급 장애인에 대하여 국,시비(70:30)+시비 자체확보(추가지원)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대전시 지원대상은 1급장애인 6400여명(2008년 12월)중 916명이며, 제공시간은 월 40~100시간(시간당 8천원)이었다. 자체 추가부담사업의 경우(시비70% +구비30%부담)로 지원하며 1급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제공 서비스 지원으로는 부족한 장애인에게 평균 40시간을 223명에게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대전시 1급장애인인구(6400여명)에 비해 추경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223명 예산으로 381명을 지원하다보니 결국 서비스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추가제공시간을 줄여야하는 사태로 서비스제공을 하고도 욕을 먹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매년, 추경예산을 땀질식의 복지예산정책은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예산이 전년도(6,028,347천원)에 비해 2010년(8,504,073천원)으로 3,084,705천원으로 56.9% 올랐지만 2009년 2차추경(381명)까지 지원했던 규모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지원대상인 1,319명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한다. 2009년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보조신규진입을 하반기부터 전면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진입과 자연증가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2010년에도 추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다른 사업과 달리 처음부터 정해진 지원대상과 규모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환경녹지국 분야

2010년 환경녹지국 예산은 약 7.95% 증가하였으나 이중 매립장과 소각장등 채무상환액 16,092,438천원과 2매립장 조성 이주 및 재해보상금 975,000천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최근 환경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실

제로 대기환경과 민감한 약취관련 예산과 508,229천원, 대기환경기반구축 예산은 568,956천원 감소하여 대전시민의 대기환경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표3> 환경녹지국 예산비교

<단위/천원>

위원회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50,848,000	100	139,732,602	100	11,115,398	7.95
환경정책과	11,688,655	7.75	12,903,167	9.23	-1,214,512	-9.41
맑은물정책과	8,208,638	5.44	9,804,452	7.02	-1,595,814	-16.28
푸른도시과	35,913,560	23.81	51,054,486	36.54	-15,140,926	-29.66
자원순환과	46,550,366	30.86	25,166,727	18.01	21,383,639	84.97
생태하천사업단	31,796,281	21.08	29,259,307	20.94	2,536,974	8.67
공원관리사업소	8,289,753	5.50	4,972,231	3.56	3,317,522	66.72
하천관리사업소	3,607,135	2.39	3,395,504	2.43	211,631	6.23
한밭수목원	4,793,612	3.18	3,176,728	2.27	1,616,884	50.9

### 1) 비용유발 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른 비용지출 문제

맑은물 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갑천하상여과시설(유성천 수영장)은 설치비만 3,593,200천원이 투입되었으며, 유지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98,574,000원(인건비 제외)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또한, 수영장운영에 따른 민원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천 역펌핑 사업으로 12,068,000천원이 이미 투입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펌프장 운영비로 매년 201,897천원씩 지출되고 있으며, 하상에 보를 설치하여 준설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대전천 역펌핑 사업의 경우 예상했던 수질목표치가 충족되고 있지 못해 75000t/일의 취수를 예상했으나 현재 24,000t/일 취수하고 있다.

이는 수요산정과 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례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천 이외에도 유등천, 갑천 대동천에도 역펌핑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유지비가 들어가는 하천시설물은 MB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자치재정감소에 따라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유지비를 고려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예산낭비 사례를 막아야 한다.

### 2)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비용 발생문제

3000만그루 나무심기 유지비 비로 772,360천원(직접 302,160천원, 지원 400,000천원, 헌수목 이식 70,200천원)이 투입되고 있다. 나무를 심는 근본 취지는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나, 나무성장에 관리가 필요한 중앙분리대 등에 식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외곽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실질적이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공 원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10년 7,125,333,000원과(국비를 포함하면 12,753,333,000원)으로 2009년 5,628,000,000원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예방대책 수립에 따른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대전시의 수해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를 부담해야 한다.(대전천, 대동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유성천, 반석천) 이중 시와 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투입액이 각각 3,188,333,000원으로 지자체의 큰 재정부담을 감겨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정비의 경우 긴박한 사업이 아니므로, 재정적 여건과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여 재검토 해야 한다.

### 4) 하도준설 비용의 근거없음

하도준설 비용 4,500,000천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알수 없다. 퇴적된 토사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토사량이 내수배제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준설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다.

### 5) 공원에 야간경비는 맞지 않음

2009년 개장한 유림공원의 관리비로 116,047천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유림공원의 야간경비 68,000천원이 소요되는 내용확인이 필요하다. 야간경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공원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담당해야 하며, 유림공원의 관리또한 하천관리사업소가 아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3. 도시교통국 분야

2010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수송 및 교통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16.5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27.4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와 관련된 예산은 1,210억원으로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1,210억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 유아 및 초등교육,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예산 다음으로 높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교통건설국 예산 구조

<단위 / 천원>

구분	시총예산 대비	의존재원별 구조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기금보조금	교부세	분권교부세	사비

	(%)							
09년	15.7%	49,909,500	11,945,000	-	-	26,965,000	4,140,910	368,015,874
10년	16.8%	43,251,721	-	10,500,000	2,531,000	-	3,600,000	278,196,703

2009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4,609억원으로 대전광역시 1, 2회 추경예산(29,397천억원) 대비 15.7%에 해당되고, 2010년 예산은 3,380억원으로 대전광역시 본예산(20,170천억원) 대비 16.8%에 달한다.

특히 의존재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은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대비 의존재원이 20.2%에 해당되는 929억원에 달하였으나, 2010년에는 598억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대비 17.7%에 불과하다.

위 [표 4]에 의하면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불안정,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축소 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표5> 교통건설국 주요 편성목별 예산지출 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3	307	309	311	401	601	701	702
2009년	114,380	9,298,139	9,835,068	3,690,238	77,018,190	9,260,000	11,288,032	5,076,600
2010년	109,316	37,799,498	4,688,573	1,173,379	107,648,460	8,430,000	11,288,032	86,600

203 업무추진비 307 민간이전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01 차입금 원금상환 701 기 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2010년의 교통건설국 예산 중 2009년과 비교하여 관심있는 사항은 민간이전 예산 대비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약 14억원 정도 증가했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3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도시철도기획단 예산변화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전체	309	311	401	404	502	601
2009년	1,241,738	-	90,738	1,151,000	-	-	-
2010년	120,677,983	4,688,573	173,000	63,010,410	31,560,000	20,746,000	500,000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502 출자금 601 차입금원금상환

대전광역시가 2009년 2회 추경 당시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0년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안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로 지원하는 출자금 207억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민자조달관리비용 630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에 46억원, 원금상환 지원에 31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7억원 만큼 이용하고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전시비에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지하철을 건설하면 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이다.

<표6> 자전거 관련 예산의 증감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본예산	2009년 1회 추경	2009년 2회 추경	2010년 예산안
금 액	6,741,178	10,407,992	12,381,992	8,633,550
증감추이	-	54.4%	15.9%	30.3%

대전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시는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확대를 위해 예산도 크게 확대했으나, 2010년에는 녹색혁명을 선도하는 매개체로 자전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년보다 30.3%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과연 대전시가 자전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2009년도에 차도 폭을 줄여 신설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2010년에도 비슷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폭 1.2m의 자전거도로를 대전시가 계속 고수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BRT) 구축과 관련한 예산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국철활용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에도 관련 노선이 중복된다. 신교통수단 구축사업은 대전역-대덕특구-행정도시-오송역으로 이어지고,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대전-계룡-세종-청주-청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선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먼저 예산이 책정된 신교통수단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인지, 광역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예산의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구축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2010년에 부담할 재원 30억원 중 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대전시가 너무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콜택시를 80대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을 2년 앞둔 2010년에 대전시가 승합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20대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 교통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전용)를 2012년 정부의 권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도로확장, 가오동길 확장 등은 주민들의 민원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 해당

도로의 오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간 도로확장, 학하지구 주진입로 도로개설 등은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사업자가 도로를 확보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은 부족한 대전시의 재정여건상 문제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은 잘못 예측된 민자사업의 전형이다. 2010년에도 교통위험지원금(교통수입이 적을 때 대전시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9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5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2009년에는 2회 추경까지 총86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도로과의 채무상환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총부채는 733억원으로 2010년에 상환하는 원금이 35억 6천만원에 불과하고, 부채로 인해 발생한 이자상환액은 21억8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보면 총 차입금이 1천79억원으로 2010년에 상환하는 원금은 40억원에 불과하고, 발생이자 상환은 37억원에 불과하다. 이로써 대전시가 자체 가용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부채를 발생키는 방법으로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도시주택국 분야

대전시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계획인구가 200만명으로 설정됐으며, 공간구조는 기존도심과 둔산도심의 2도심과 신탄진·유성·진잠지역의 3부도심, 용전·용계·유천·도룡·중리·오류·용문등 13지구중심으로 구분했다.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선 안 될 것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의 예산에 따른 계획을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구조가 취약한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을 우선해제하고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 수요발생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시 우선해제 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기본계획 등을 보면 환경적인 부분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 도시 내 재정비 사업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량재개발 등 대상지구의 특성과 도시계획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도시재개발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전시는 활력있는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에 따른 도심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래지향주택정책,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예산이 짜여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대전역세권재정비(국비 31억원), 상서평촌지구 재정비(국비70여억, 시비36여억), 선화용두재정비(국1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국28여억, 시비 14여억) 등 매칭펀드 방식의 국

비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전시는 총 1,122,000천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대학이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에게 대학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1회성 축제나 담장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위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생 및 주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주택국 사업 중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98,600천원),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66,000천원),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273,000천원), 상서평촌지구실시설계(700,000천원), 선화응두축진지구 실시설계(1,870,000천원), 2020주택종합계획수립(127,000천원),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320,000천원) 등 용역에 따른 예산이 3,454,600천원에 이른다. 용역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 시 신중을 기하고,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제안, 민간공모제 등에 대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 5. 공보관실 분야

<표7> 세출예산 총괄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2,873,195	100.0	2,743,348	100.0	129,847	4.7
1. 시정시책종합홍보	2,554,999	88.9	2,415,649	88.1	139,350	5.8
2. 행정운영경비	318,196	11.1	327,699	11.9	△9,503	△2.9

공보관실 예산은 크게 시정시책종합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뉘어져있다. 2010년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2,873,195,000원이며 이중 시정시책종합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2,554,999,000원으로 책정돼 시정홍보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공고 및 홍보비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1. 시정시책종합홍보	2,554,999	100.0	2,415,649	100.0	139,350	5.8
201.01 -조례,규칙,고시등 신문공고	50,000	2.0	50,000			
201.01		11.7	당250,000		△200,000	△40

-주요시정홍보비	300,000		추250,000 계500,000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42,750					
-시책홍보활동	19,000	3.0	76,475			
-언론홍보활동 업무추진	7,125					
-공보보도행정 업무추진	7,600					

전체 시정시책종합홍보 예산 중 언론사 광고 및 홍보비로 책정된 예산은 426,475,000원으로 16.7%(전체 공보실 예산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언론사의 공보, 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신문광고비 50,000,000원, 주요시정홍보비 300,000,000원,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42,750,000원, 시책홍보활동 19,000,000원으로 총 411,75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광고, 홍보 예산의 경우 광고료 예산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2007, 2008년 전국 민언련이 발표한 자치단체 광고, 홍보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들 예산 대부분은 자치단체 홍보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기는 하나 자체 홍보비 집행기준이 없이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집행 상황을 고려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관행적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 여부 및 실 구독자 확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집행되는가 하면, 사주가 형사처벌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언론사에도 홍보비가 집행 돼 지역신문의 난립 현상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대전충남 권역 이외의 언론사에도 무분별한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져 본래 홍보 목적 달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현 언론홍보비 집행의 경우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42,750,000원, 시책홍보활동 19,000,000원 등의 예산 처럼 자치단체장의 기획 홍보(특정 이슈 및 자치단체장 기획 인터뷰 기사 등) 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언론사 관리 비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언론 홍보의 경우 홍보 대상 언론사의 발행부수 및 시청률, 지역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나 현재 정부 차원의 발행부수 검증 등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자체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9> 인터넷 방송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인터넷방송 운영	729,310		600,486		128,824	21.5
307.05 -민간위탁	424,000		404,000		20,000	5

2010년 인터넷 방송 운영관련 예산은 전체 729,310,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 사업은 지난해 인터넷 방송 개국 과정에서 TJB대전방송과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간위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한 424,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인터넷의 역할 증대에 맞춰 양방향성 특성을 실린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기회 제공 및 욕구충족을 위한 홍보매체 육성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대 시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효율성을 측정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추진실적(2009.9.30 현재)으로 영상제작물(이츠대전 뉴스 등) 455편, 각종 행사 촬영 언론사 제공 715건, e-대전뉴스 게재 홍보 495건 등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인터넷 방송 이용자(방문자)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시 인터넷방송이 실시한 UCC 공모전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 등으로 진행됐으나 공모작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제 인터넷방송 이용자 추산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인터넷방송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의문시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관으로 TJB대전방송과 위탁업무 체결과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인 TJB대전방송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로 민간위탁 기관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자칫 신 관연유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높으며, 실제 자치단체와 방송사의 계약 관계로 인한 뉴스의 연성화(자치단체 비판 보도 비중 하락 등)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기능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6. 기획관리실 분야

시정계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은 예산의 99%가 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4,269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자체이용재원이 아니라 이전재원이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1,795억 원(전년 대비 0.13% 감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864억 원(1.87% 증가)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한다.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78% 증가했으며 주요요인은 예수금상환비용 증가로 보인다.

<표10> 이전재원 현황

<단위 / 천원>

	2010년	2009년	증 감	
			증 감 액	비 율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79,519,280	179,757,280	▲ 238,000	▲ 0.1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6,379,000	182,953,287	3,425,713	1.87

정책기획관리실이 추천한 녹색성장과 관련한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새로이 정책단위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237,330천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없고, 다른 정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짜깁기하여 규모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 정책으로 실제 새로 세워진 예산은 2천 3백만 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모두 운영비와 여비로 정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고, 단지 이름에 걸맞은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해 짜깁기한 것뿐이다.

<표11> 녹색성장 관련 예산 분석

<단위: 천원>

단      위	예      산	
녹색성장전략수립 운영비	16,600	관련 예산
녹색성장전략수립 여비	1,365	
녹색성장전략수립 일반보상금 (세미나)	4,000	
공공기관유치 여비	1,365	23,33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4,000	관련 없는 예산
지역발전협의회 (민간이전)	90,000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실임차료	60,000	214,000
계	237,330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전시에 도입되고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올 해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출발의 취지는 좋으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3천 8백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작년보다 4백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 적당한 홍보와 자료집 발간, 몇 개의 회의와 세미나에 실비 보상하는 것 정도 밖에는 안된다. 즉,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테니, 의견을 말해봐라"정도의 사업 밖



에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본다면 3천 8백만 원도 많다.

주민참여예산제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편성에 실제로 참여할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정보구축사업에 28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어져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담당관실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도로, 하수도, 공원, 체육시설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책정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석교동 공중화장실 설치 등 33건에 28억원이 배정되었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처럼 통치를 위한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추진하는 행정정보 구축 사업에 총 28억 원, 인터넷웹기반 구축 사업에 6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민주적인 행정 참여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표12> 행정정보구축 예산

<단위 / 천원, %>

	2010년	2009년	증감	증감율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489,658	648,469	▲ 158,811	▲ 24.49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81,600	410,373	871,227	212.30
모바일시스템 구축	372,910	-	372,910	신규
시도행정 정보화	344,456	391,680	▲ 47,224	▲ 12.06
시군구 정보화	352,248	312,472	39,776	12.73
계	2,840,872	1,762,994	1,077,878	61.14

<표13> 인터넷웹기반구축 예산

<단위 / 천원, %>

	2010년	2009년	증감	증감율
인터넷시스템 운영	96,591	369,435	274,626	74.34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547,470			
e-시정도우미 운영	2,000	2,000	0	0
계	646,061	371,435	274,626	73.94

서울사무소는 6천 6백 2십만 원을 들여 새로 관용차량을 구입한다. 기존 01년식 체어맨 차량(주행거리 21만 8천km)의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고급차량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의전용도 아니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기 위한 업무추진 차량이라면 이렇게 고급승용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Ⅳ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총괄평가

대전시는 2010년 재정운영 방향을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투자, ▶09년도에 이어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 SOC사업,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박성호 대전시장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속보이는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이 위기라고도 진단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공약 마무리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할 분야일까란 생각이 든다. 그것도 모자라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또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의문이다.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속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152억원을 삭감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공약사업 마무리를 강조해야만 했을까?

다음으로 시는 재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긴급구호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울러 교육,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에 나서야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면서도 대덕특구 및 투자마케팅 분야 사업 등 경제과학국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면서 자치행정 등 정부분야 총예산은상대적으로 확대편성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선4기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잇따라 실패하고 과학도시로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위기속에서 중추적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 본래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매진해야 할 이때에 관련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2010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것도 문제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시장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편성으로는 단기적인 개발사업으로 끝나는 만큼 고용유지연한도 작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은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지방세 감소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것인가이다. 이미 2009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물론, 대전시가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권고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올 2월 보도자료를 통해 SOC 투자재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일부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지방채 과다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자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부담을 늘리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 향후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본격시행에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의 2010년도 예산편성 안을 분석해 보았다. 좀더 체계적이고 미시적인 예산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규모를 중심으로 대략적 수준의 분석에 그쳤다.

분명한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규모가 줄어들고 전체 세입규모의 위축에 따른 2010년 대전시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빌미로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 조차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특단의 방안을 예산편성에서부터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중앙정부 지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지방간 격차가 큰 지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게 되어 전체 사업예산의 지방간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가 2009년대비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을 152억원이나 삭감편성한 것은 문제다. 2010년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총 61개 분야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더 크다.

물론,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의 1차적 원인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개발사업 등 잘못된 재정기조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 진영의 보다 분명한 반대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대전시가 사회복지 예산부터 축소시킨 것부터 문제제기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앞서 지적된 사안 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나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가운데 상당금액이 동원형 행정 및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적지않다는 점에서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 재정운용 전반을 재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발제 2.

# 2010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발제 : 이찬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

□ 세입예산 총괄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1,297,065,360	100.0	1,203,346,792	100.0	93,718,568	7.8
1. 이전수입	1,080,385,940	83.3	1,144,174,561	95.1	△63,788,621	△5.6
2. 자체수입	47,349,420	3.6	49,172,231	4.1	△1,822,811	△3.6
3. 차입	146,330,000	11.3	0	0.0	146,330,000	100.0
4. 이월금	23,000,000	1.8	10,000,000	0.8	13,000,000	130.0

- 총 세입 1,297,065,360천원으로 09년 대비 7.8% 증액  
이전수입은 09년 대비 △637억원(△5.6%) 감소  
: 중앙정부이전수입 △606억(△6.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억(△1.7%) 감소
- 이전수입 감소예산은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차입으로 충당: 1,463억원
- 전년도 이월금 230억으로 09년대비 130억(130%) 증가

- . 대전교육청 세입 본예산 1조원 돌파, 추경까지 합하면 1조 4,000억 예상  
-08년 본예산 대비 2차 추경 367억 증액  
-09년 본예산 대비 2차 추경 673억 증액
- . 외형상 총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차입금의 증가로 재정 건정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자 부담 경비의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 이전수입감소는 부자감세(총 90조원), 4대강 사업 추진(22조원)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감소로 2010년 교육예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 . 이는 가뜰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임

□ 세출예산 총괄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1,297,065,360	100.0	1,203,346,792	100.0	93,718,568	7.8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34,501,753	95.2	1,154,593,743	96.0	79,908,010	6.9
2. 평생.직업교육	2,435,472	0.2	2,458,532	0.2	△23,060	△0.9
3. 교육일반	60,128,135	4.6	46,294,517	3.8	13,833,618	29.9

○ 세출예산 총괄 구성(정책사업별)변화 분석

- 1. 유아및 초중등교육 2. 평생,직업교육 3. 교육일반으로 구성
- 유아및초중등교육비는 전년대비 6.9%, 교육일반은 29.9% 증가하고 평생교육은 0.9% 감소

○ 09년 대비 부분별 변화 분석

- 인건비는 전체예산 대비 큰 변화없음(구성비의 변화 09년 59.3% → 10년 55.1%)
- 교수-학습활동비는 16.5% 증가, 학교재정지원비는 소폭 상승(09년 17% → 10년 18.2%)
- 증가부분과 감소부분 비교

[증가]

1)인적자원운영 17억, 2)교수-학습활동지원 100억, 3)교육격차해소 104억, 4)학교재정지원관리 310억, 5)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88억, 6)교육행정일반 117억, 7)기관운영관리 13억, 8)예비비 및 기타 33억

[감소]

1)보건/급식/체육활동 21억, 2)평생교육 1949만, 3)직업교육 357만, 4)지방채상환리스크 261억

- . 실제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6.9% 증가), 평생.직업교육(0.9%감소)의 예산편성에 비해 교육행정,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일반 부분 예산 증가율이 29.9%에 달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고통분담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음
- .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6.5% 증가한 것을 바람직한 일이나 외국어(영어)교육활성화라는 특정사업에만 무려 83.1%가 증가하여 교과 교육간의 불균형이 심각함.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증가분(109%, 512억)은 대부분 학교신설에 따른 비용(99%, 512억)으로 교육 환경개선 효과는 미미함

## □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 1. 불용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지원,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007년도 불용액은 266억(2.5%)이었으나 2008년도는 650억(5.0%)로 2배 증가하였다.  
불용액에 대한 소관부서별 비교해 보니 불용률이 1.8%에서 20.6%까지 편차가 심했다. 불용률이 10%이상 소관부서는 8곳이나 되었다. 혁신복지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수원,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으로 본청 산하 기관들(6곳)의 불용률이 높았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미집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공통점을 찾아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수립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08년도 교육청의 불용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의 예산 운용 잘못으로 일선 현장의 교사,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 시교육청의 불용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연수지원 2,953만원, 초등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지원 6억4,645만원, 특수교육진흥 3억8,887만원, 중등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20억2,795만원 등으로 나타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008년도 대전시교육청의 불용 예산 650억 원은 관내 전체 초등학생 114,621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 $114,621\text{명} \times 1,700(1\text{식}) \times 180(\text{일}) = \text{약 } 350\text{억원}$ )이며, 중학교 학교운영비( $67,021\text{명} \times 52,680\text{원} \times 4\text{분기} = \text{약 } 142\text{억}$ )의 전면 폐지로 무상의무교육 실현하고도 충분한 금액이다. 결국 대전시교육청이 매년 예산 타령 운운하며 단위 학교 예산 확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예산 확대에 인색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소신의 부재인 것이다.
- 현재 시의회에서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2009년도 집행 예산과 불용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2010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대전지역의 주요 이슈인 교육양극화 해소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관	2007년도		2008년도	
	불용액 (단위:천원)	불용률(%)	불용액 (단위:천원)	불용률(%)
교육위원회	3,413	0.7	41,359	7.4
교육정책담당관	26,362	6.7	112,326	6.9
혁신복지담당관	140,441	3.8	316,387	11.2
공보감사담당관	8,376	2.7	57,325	12.2
초등교육과	1,292,525	6.2	1,059,771	3.4
중등교육과	1,215,520	3.5	4,004,461	6.7
과학직업정보과	97,559	0.8	177,414	1.8
평생교육체육과	345,080	3.7	512,653	4.2
총무과	846,549	1.1	6,241,496	5.9
행정지원과	12,338,710	2.1	942,909	1.1
재정지원과	1,456,211	1.6	33,331,129	5.2
시설과	1,195,087	7.9	1,748,441	3.6
대전교육연수원	175,295	13.1	328,414	10.8
대전교육과학연수원	94,834	6.3	461,950	12.0
대전평생학습관	40,566	4.4	140,125	13.0
대전학생교육문화원	62,576	7.7	264,793	20.6
한밭교육박물관	28,463	14.8	34,435	13.1
대전학생해양수련원	54,711	7.9	85,549	10.8
대전교육정보원	236,923	6.7	305,851	6.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3,342,989	3.2	7,579,352	5.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3,674,288	4.2	7,304,594	5.1
	26,676,478	2.5	65,050,743	5.0

## 2. 대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교사중심의 교원노조 지원 사업은 증액하여야 한다.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교육과정개발운영 (세부사업)통일대비교육

(단위 : 천원)

2. 통일학예행사 [교육국 중등교육과] 학생통일행사지원	2,000,000원×1단체=	2,000 (2009년 4,000)
--------------------------------------	-----------------	------------------------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특수교육진흥 (세부사업)특수교육운영지원

(단위 : 천원)

1. 장애아동행사지원 [교육국 초등교육과] 가. 장애아동행사지원	3,000,000원×1기관=	3,000 (2009년 6,000)
---	-----------------	------------------------

\* 장애아동행사= 장애차별철폐주간행사, 장애아동계절학교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특별활동지원 (세부사업)각종단체행사지원

(단위 : 천원)

1. 각종단체행사지원 [교육국 초등교육과] 1) 어린이날행사지원 3) 참교육실천보고대회지원 4) 저소득층아동특색사업지원	2,500,000원×30명=	75,000
[교육국 중등교육과] 가. 교원단체특색사업지원 나. 교원단체학생축제지원	2,500,000원×25명=	62,500

- 어린이날 행사는 대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140여개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700여명의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참교육실천보고대회는 현장 교사들의 실천결과물 30여 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로서 교육청 어느 행사보다 알찬 행사이다. 학생통일행사로서 2009년 통일마라톤 대회는 시민 1,000여명과 학생 400여명이 같이하여 대전지역 사회 여름 마라톤대회로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장애아동행사의 경우는 대전 지역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통합하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행사들은 대전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100% 활용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수십 명 교사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 대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여 권장하고 장려하여 진행하여야 행사들이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상 자부담에 대한 노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 예산에서 50%를 감액한다는 것은 교육적 성과를 무시하고 단순히 회계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본다. 이는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 3. 해외(국외)연수 공모제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사업명: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단위사업)교원역량강화(세부사업)교원연수지원

(단위 : 천원)

4. 교육공무원해외선진규체험연수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원(자체)	2,500,000원×30명=	75,000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원(자체)	2,500,000원×30명=	75,000
[기획관리국 재정지원과] 교과부주관	3,500,000원×6명=	21,000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단위사업)학력신장-(세부사업) 학력신장지원단운영

(단위 : 천원)

3. 학력신장우수교원해외체험연수 [교육국 중등교육과] 해외체험연수	2,300,000원×25명=	57,500
--	-----------------	--------

- 주로 교과부나 교육청 시책사업의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해외연수자격과 예산을 해외연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성과를 분명히 내어 올 수 있는 '공모형식'의 해외연수계획과 예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외(해외)연수 후 보고서 작성, 연수자료 발간 등의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연수계획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 해외체험, 우수교원, 전문성신장, 전문직연수, 교육훈련, 비정규직업무담당자, 시·도 교직원체업무담당자 등 모호한 목적으로 이뤄지거나 굳이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해외연수는 그 목적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학력신장지원단 운영사업의 경우, 해외체험연수가 총 사업비(108,500천원)의 53%로 세부사업 중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작년의 경우 연수내용도 관광성 연수에 가까웠다. 이도 교원연수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포상 성격을 지양하여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4. 외국어(영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과 예산낭비 요소가 매우 크다.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외국어교육

(단위 : 천원)

단위사업	2008 결산	2009 예산 ①	2010 예산 ②	증감 ③=②-①	증감율 ③/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합계	64,409,171	60,700,262	70,705,253	10,004,991	16.5
외국어교육	12,582,244	8,914,356	16,320,260	7,405,904	83.1

(세부사업) 외국어교원연수지원 (1,412,838천원)

- 사업내용 및 계획

- 영어교사 심화연수 : 초중등 영어교사 30명(한국교원대학교, UC CDP센터)
- 영어교사 국외연수 : 초중등 영어교사 30명(1인당 연수 여비 및 경비 550만원)
- 영어교사 직무연수
  - TEE 직무연수 : TEE능력향상 연수(일과후), 연7기 운영(1기당 4학급)
  - 영어교사 집중심화연수 : 200시간(중등), 120시간(초등), 연6기
  - SIT 태솔연수 : 중등 40명, 180시간, 연수 경비 및 여비 지원
  - 단기집중 태솔연수 : 90명, 100시간, 방학중 실시, 대학 위탁
  - 초등교사영어회화연수 : 초등교사 120명, 60시간, 방학 중 실시, 대학 위탁
  - 필수이수학점점제 : 원격연수, 30시간, 초등교사 1,000명, 연수 콘텐츠 개발
- 영어교사 자기연수지원
  - 대학 태솔과정 수강교사 지원(1인당 1,500천원, 25명)
  - 교사교육자 심화연수(24명, 향후 원어민 대체교사 및 교사교육자 활용)
- 제2외국어교원 국외연수지원 : 제2외국어교원 국외연수 항공료(독1, 일2, 중2)
- 대전영어교육센터운영
  - 원어민 연수강사 운영 : 교사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 원어민 연수 강사 4명
  - 연수과정 운영 : TEE 직무연수, 영어교사 집중심화연수 과정 운영
  - 영어교사 연수경력 관리시스템 운영 : 영어교사 6,986명 연수경력 관리
- 우수영어교사인증제(TEE인증연수과정)
  - 대상인원 : 초중등 영어교사 80명
  - 연수시기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연수시수 : 60시간(영어교육방법 전문성+TEE 수업실연 과정)

(세부사업)원어민교사운영(11,977,137천원)

원어민교사 운영현황 및 계획(교육감 계약)

- 2009년 하반기 총인원: 170명, 2010 예상총인원 : 220명
- 2010년 신규원어민교사 초청/운영(3월:60명/9월:70명)
- 재계약 미체결 예정자 대체초청 80명, 증원 50명

(현재 35학급 겸임배치를 중24학급, 초30학급으로 조정 시 소요 인원 50명)

- 원어민교사 인건비, 주거비, 출국지원금, 퇴직금 등 지급

(세부사업)외국어교육활성화지원(2,930,285천원)

나. 사업내용 및 계획

영어교육연구회(7개팀, 팀당 연구지원금 250만원, 자료개발 7종)

영어발표한마당축제

영어듣기평가

영어교육지원단 운영

초등영어교육지원단

영어능력인증평가

외국어 학습자료 개발

영어교과수업연구대회

영어교육개선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중등 영어전용교실구축

초등 영어실 구축

헤르메스 초등영어교실

영어 부진아 지도자료 개발3종

EBS 영어교육방송활용시범학교 6교 운영

대전영어교육센터

합숙대전영어캠프

- . 전체 교과교육 부분 중 영어교육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은 교과간의 불균형 초래
- . 교수-학습활동비 전체 예산 중 영어교육예산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으나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시큰등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매우 크다
- .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등 해결책 모색
- .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현장 영어교사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 . 자질의 문제, 역할의 문제, 학생들의 호기심 감소, 원어민 관리업무 증가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 . 5년 단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라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하여 역량축적이 의문이다
- .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있는 영어교사 육성(교대, 사대)과 임용에 대한 정비로 극복해야 한다.

**5. 학교회계 전출금에 목적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커다란 파행을 일으킬 수 있다.**

○ 2009년도 학교회계 전출금 중 학교교육비 대비 목적사업비가 43.8%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단위학교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교직원간에 논의되지 않아 교육활동에 상당한 파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경직성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전시성 행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짧은 선정과정과 집행기간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줄속으로 집행될 염려가 많다.

-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단위학교 예산지원 확대 및 예산운영 자율권 강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별 목적사업비 감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적사업비 감축비율	43.8%	40% 이내	30% 이내	20% 이내

- 목적지정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가용재원을 총액배분 확대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용권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대전00고등학교 목적사업비 현황]

세출항목	산출기초	세출액(단위:원)
인건비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4,464,000
학생복지비	석면개보수및홍보자료제작비	193,500
	고1학년성교육강사비	240,000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4,941,600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교육활동비	9,565,680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장학금	1,400,400
	자유수강권지원금	4,982,690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금	14,422,500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금	11,110,100
	소계	46,856,470
교수학습 활동비	수능대책특별지도지원비	867,000
	자녀지도연합순찰대주관학교운영비	1,058,300
	소수선택과목강사비	5,700,000
	교실첨단화기기교체비	4,311,230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운영비	4,000,000
	배움터지킴이운영비	6,660,000
	사교육비경감대책특별지원금	11,420,000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비	20,230,000
	대학수학능력시험장학교경비	14,407,250
	수준별이동수업운영비	34,908,200
	영어교실구축비	50,119,600
	소계	153,681,580
공통운영비	학교급식환경개선및기구교체비	5,550,000
합계		220,502,050

목	예산 대비 목적사업비 현황(단위:천원)		
	2008 예산 ①	2008 목적사업비 ②	비율(%) ② / ①
인건비	140,525	14,464	10.2
학생복리비	47,539	46,856	98.6
교수학습활동비	222,959	153,681	68.9
공통운영비	265,174	5,500	2.1

6. BTL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높아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도 사실상 채무행위로서 교육청 계획대로 향후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재정상의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인건비의 비중이 큰 대전시교육재정에 앞으로 세수감소로 인한 중앙정비예산수입(606억)과 지방자치단체예산수입(31억)의 감소 그리고 BTL사업으로 장기간 부담하는 임대료(원금+이자)(131억)를 더한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2009~2013)>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확보계획](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도 현재 미납분	2010년 이후 확보계획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40,835	31,811 (5교)	30,281 (5교)	19,262 (3교)	.	(학교수)

○ 2009년도 현재 미전입액 408억원은 대전시와 협의하여 5년 이내 균등 전입될 수 있도록 요청 계획

####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계획](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구분	발행연도	발행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결손분	2009	67,262	3,195	3,195	3,195	3,195
학교신설분	2010	146,330		9,512	9,512	58,289

(세부사업)지방교육채상환(3,194,934천원)

나. 사업내용

- 사업명 :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 67,261,749천원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2014년까지는 이자만 상환
- 2015년부터는 원리금 상환

- 상환재원 : 전액 국고부담

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 2009년도 상환실적
  - 2007년도 교원명퇴수당지급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분 7,141,712천원
- 2010년도 상환계획
  -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2010년도는 3,194,934천원의 이자만 상환(국고부담)

(세부사업)민간투자사업임대료및운영비(13,116,684천원)

나. 사업대상

- 은어송초 외 28교 민간투자사업

다. 사업내용

- 신설학교 : 은어송초 외 13교 민간투자사업
- 기존학교 : 구죽초 재건축 및 옥계초 외 13교 증.개축

라. 사업실적

- 신설학교
  - 은어송초 외 4교(교촌초, 동서초, 은어송초, 가오고) 신축(45,683.16m<sup>2</sup>)
  - 수정초 외 4교(송림초, 글꽃초, 글꽃중, 용산초) 신축(48,046.67m<sup>2</sup>)
  - 관평초 외 2교(관평중, 복수고) 신축(27,021.08m<sup>2</sup>)
  - 상대초 신축(10,135.86m<sup>2</sup>)
- 기존학교
  - 구죽초 재건축(8,872.54m<sup>2</sup>)
  - 옥계초 외 9교(중촌초, 대문초, 법동초, 문창초, 대양초, 신평초, 중원초, 중리중, 대화중) 증.개축(15,255.39m<sup>2</sup>)
  - 버드내중 외 3교(봉산초, 문지초, 둔산중) 증.개축(10,257.11m<sup>2</sup>)

7. 연구시범학교운영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선정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연구시범학교운영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가 운영되어 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점수 획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선정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학교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축소 운영 및 지정하기 전에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업명: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연구시범학교운영 (세부사업)연구시범학교운영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예산액			
	2009 예산 ①	2010 예산 ②	증감 ③ = ② - ①	증감율 ③ / ①
748,717	658,921	748,717	89,796	13.6

- 2009년도 총82개 연구학교 운영
  - 학교급별 연구학교 현황 : 유치원(2원), 초등학교(39교), 중학교(24교), 고등학교(16교), 특수학교(1교)
  - 지정기관별 연구학교 현황 : 교육부지정(4교), 시지정(78교)
  - 지정 영역별 연구학교 현황
    - .교육정책 담당관실 :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업
    - .초등교육과 : 유아교육, 안전교육, 다문화교육, 방과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과학교육, 실과교육 교내장학, 독서.논술교육 등에 관한 사업
    - .중등교육과 : 학력신장, 사교육경감, 학생생활지도, 학습부진학생지도, 인성교육, 대안교육, 수학교육, 통합논술 등에 관한 수업
    - .과학직업정보과 : 과학교육, 정보교육, 직업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등에 관한 사업
    - .평생교육체육과 : 평생교육, 체육교육, 아토피천식 등에 관한 사업

## 8. 단위학교에서 학생1인당 학생복리비와 교수학습활동비의 학교간 차이는 전체 세출액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교육비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단위학교 내에서 어느 항목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형평성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학교 내에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예산의 우선순위를 교수학습활동비나 학생복리비보다 간접적인 지원경비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전체 세출액에서 학생1인당 경비가 높다 하더라도 학생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는 낮을 수 있다. 단위학교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단위학교 간 직접교육비 지출의 형평성은 매우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은배 외, 2007: 190,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연구)

[2008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학교 단위학교 결산1]

(단위:원)

학교명	자치구	학생수	1인당 학생복리비	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
대전대화중학교	대덕구	519	153,681	448,730
대전매봉중학교	대덕구	1222	90,448	239,832
대전법동중학교	대덕구	1,732	113,723	298,092
대전송촌중학교	대덕구	1,622	76,822	181,278
오정중학교	대덕구	372	408,105	582,654
대전용전중학교	대덕구	811	117,194	329,461
중리중학교	대덕구	940	89,262	521,712
신탄중앙중학교	대덕구	896	155,840	242,080
회덕중학교	대덕구	389	295,406	503,632
대전대청중학교	대덕구	668	108,544	421,750
			160,903	376,922

학교명	자치구	학생수	1인당 학생복리비	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
대전가양중학교	동구	1,277	142,021	217,372
대전가오중학교	동구	399	413,212	436,679
대전용운중학교	동구	668	217,213	351,409
동대전중학교	동구	812	134,178	221,110
동신중학교	동구	486	297,794	587,276
충남중학교	동구	1,100	165,729	273,024
한밭여자중학교	동구	618	169,131	558,112
한밭중학교	동구	540	216,442	566,807
대전은어송중학교	동구	827	107,547	290,595
			207,030	389,154

[2008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학교 단위학교 결산2]

(단위:원)

학교명	자치구	학생수	1인당 학생복리비	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
대덕중학교	유성구	647	89,643	274,986
대전노은중학교	유성구	1,088	85,268	178,821
대전문지중학교	유성구	807	115,655	190,742
대전송강중학교	유성구	668	176,853	376,840
대전어은중학교	유성구	832	81,749	210,606
대전전민중학교	유성구	822	70,460	216,656
대전지족중학교	유성구	1,167	68,815	197,217
유성중학교	유성구	554	200,850	295,615
진잠중학교	유성구	717	102,944	268,026
대전장대중학교	유성구	710	163,308	357,984
대전외삼중학교	유성구	838	102,050	250,888
대전두리중학교	유성구	814	73,121	345,060
대전자운중학교	유성구	297	65,453	668,299
대전하기중학교	유성구	438	96,035	379,924
대전동화중학교	유성구	754	59,110	392,322
대전관평중학교	유성구	469	43,783	710,689
			99,694	332,167

학교명	자치구	학생수	1인당 학생복리비	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
대전대문중학교	중구	623	389,498	304,126
대전문화여자중학교	중구	842	99,824	347,627
대전여자중학교	중구	430	218,436	553,742
대전중학교	중구	645	130,080	403,981
대전태평중학교	중구	1422	90,863	206,128
충남여자중학교	중구	1060	60,841	407,501
대전글꽃중학교	중구	1127	83,262	306,079
			153,258	361,312

[2008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학교 단위학교 결산3]

(단위:원)

학교명	자치구	학생수	1인당 학생복리비	1인당 교수학습 활동비
가수원중학교	서구	666	123,144	466,987
갈마중학교	서구	675	134,479	393,625
기성중학교	서구	94	678,802	787,540
대전갑천중학교	서구	1,241	134,857	213,292
대전관저중학교	서구	1,043	90,254	354,270
대전남산중학교	서구	885	210,862	472,060
대전내동중학교	서구	802	102,813	312,869
대전도마중학교	서구	694	125,361	450,293
대전둔산중학교	서구	1,292	88,295	231,629
대전둔원중학교	서구	1,210	101,873	244,288
대전만년중학교	서구	1,080	96,487	246,235
대전문정중학교	서구	1,917	81,367	239,843
대전버드내중학교	서구	1,006	118,828	301,638
대전변동중학교	서구	723	119,209	283,352
대전봉산중학교	서구	587	162,279	374,582
대전봉우중학교	서구	834	78,390	220,027
대전삼천중학교	서구	2,178	72,650	157,309
대전서중학교	서구	730	231,536	437,975
대전월평중학교	서구	881	151,737	287,272
대전정림중학교	서구	897	134,128	255,474
대전탄방중학교	서구	2,148	77,277	119,546
대전느리울중학교	서구	739	108,187	296,051
대전신계중학교	서구	588	80,885	380,654
대전구봉중학교	서구	818	103,207	289,143
대전괴정중학교	서구	1,015	73,907	293,220
			139,903	318,424

9. 사학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사학 재정지원액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 사업명: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사학재정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08 결산	2009 예산 ①	2010 예산 ②	증감 ③ = ② - ①	증감율 ③ / ①
합계	118,638,610	119,997,064	122,335,823	2,338,759	1.9
인건비재정 결합보조	113,609,547	114,326,682	115,408,021	1,081,339	0.9
운영비재정 결합보조	5,029,063	5,670,382	6,927,802	1,257,420	22.2

○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2008년 관내 21개 학교법인에 대해 운영평가(2005.3.1 ~ 2008.2.29)를 하였다. 교육청은 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 . 운영 요건의 기본이 되는 법인의 재정자립도 및 교육행정 여건을 분석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법인들의 재정자립도 및 교육행정 여건을 분석 하였고, 그 결과 사학법인들의 재정적 부실과 학교 행정의 비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요건에 충족되는 사학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실한 사학재정은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

<표1>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21개 법인 중 6개 법인만이 충족하고 나머지 12개의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미달하여 지속적인 재산확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표2>를 보면 전체 법인의 재산보유액 52,385,196천원에 발생한 최근 3년간(2005~2007 학년도)의 연간 평균 수익액은 1,256,244천원으로(수익률 2.4%)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표3>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4,676,657천원이나 실제 부담액은 425,806천원으로 부담률이 9.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90% 이상은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재산보유액 대비 수익률이 2.4%라는 것이다. 이는 법인들이 재산은 있지만 실제 학교에 대한 투자나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마저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열악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차별적 피해를 주고 있다

<표4>에서 법인이 학교에 기부하는 법인 기부금은 8개 법인에서 3년 평균 808,633천원이 있었고, 13개 법인은 기부금 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사학법인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를 사립학교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거의 모든 법인들이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생색 내기식의 기부금만 내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표5>를 보면, 전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대비 법인 부담액이 26%로 저조하며, 그나마도 학교법인에서 설

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은 1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3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한 푼도 재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벌써 많은 차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무소불위 사학 행정은 민주주의 절차마저 훼손하고 있다

<표6>을 보면 구내매점 등 구내재산 임대에서 14개 법인에서 총 33건을 임대계약하면서 12건 (33.6%)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임대계약을 할 때 꼭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수익을 높이라는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또 <표7>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최근 3년간 심의대상 88건 중 정상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37건으로 심의율이 4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면 조사가 아닌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해 보면 42%보다 더 저조한 심의율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사립학교의 운영이 이사장과 학교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이미 서두에서 밝혔듯이 2008년 사학법인 운영 평가를 통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운영 요건의 기본이 되는 법인의 재정자립도 및 교육행정 여건을 분석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사학을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교육청이 조사한 이 자료에서 관내 21개 학교법인은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환경은 오히려 일반 공립학교보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운운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사학들의 건전한 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 표목차

- <표1>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 <표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현황
- <표3>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3개년 평균)
- <표4> 법인세 환급 및 기부금 유치현황(3개년 평균)
- <표5>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법인 부담 현황(3개년 평균)
- <표6> 공납금 징수율 및 구내재산 임대 입찰 현황(3개년 평균)
- <표7> 교사 공개전형 및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표 1]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법인명	운영수익액	확보기준액	확보액	확보율(%)
1	경 금	3,755,263	1,877,632	3,222,288	172
2	경 덕	7,228,064	3,614,032	541,451	15
3	계 룡	5,973,198	2,986,599	371,468	12
4	대 성	20,243,318	10,121,659	11,502,298	114
5	대 신	7,268,381	3,634,191	3,139,846	86
6	대 운	4,594,217	2,297,109	959,946	42
7	돈 운	2,277,044	1,138,522	7,948,863	698
8	성 모	6,267,282	3,133,641	205,200	7
9	동 준	4,898,890	2,449,445	2,243,080	92
10	명 신	1,991,364	995,682	835,454	84
11	석 봉	8,069,588	4,034,794	2,192,561	54
12	신 일	6,974,313	3,487,157	2,278,673	65
13	우 송	9,672,642	4,836,321	4,000,800	83
14	유 명	5,420,401	2,710,201	5,196,339	192
15	한 빛	2,589,945	1,294,973	408,727	32
16	해 광	4,143,490	2,071,745	1,319,058	64
17	이 문	7,206,438	3,603,219	248,947	7
18	행 촌	8,010,313	4,005,157	1,382,871	35
19	혜 정	6,501,597	3,250,799	385,489	12
20	동 방	5,109,621	2,554,811	3,454,915	135
21	호수돈	8,054,626	4,027,313	4,519,276	112
계		136,249,995	68,124,998	56,357,550	83

[표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현황

(단위 : 천원)

	법인명	3년간 평균 재산보유액	연간수익액	수익율	비고
1	경 금	2,454,374	18,988	0.77%	
2	경 덕	501,597	14,324	2.86%	
3	계 룡	364,781	18,299	5.02%	
4	대 성	10,410,860	65,332	0.68%	
5	대 신	3,062,131	128,428	4.19%	
6	대 운	485,644	12,037	2.48%	
7	돈 운	8,488,588	126,100	1.49%	
8	성 모	205,200	11,515	5.61%	
9	동 준	1,685,236	780	0.05%	
10	명 신	796,539	17,104	2.15%	
11	석 봉	1,550,169	22,246	1.44%	
12	신 일	1,636,509	35,840	2.19%	
13	우 송	3,791,919	80,084	2.11%	
14	유 명	6,143,315	426,337	6.94%	
15	한 빛	366,630	2,031	0.55%	
16	해 광	1,302,988	34,054	2.61%	
17	이 문	248,947	9,955	4.00%	
18	행 춘	1,215,727	56,255	4.63%	
19	혜 정	349,256	20,072	5.75%	
20	동 방	3,455,596	92,661	2.68%	
21	호수돈	3,869,190	63,802	1.65%	
계		52,385,196	1,256,224	2.40%	



[표 3]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3개년 평균)

(단위 : 천원)

	법인명	부담금 산정액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경 금	128,116	14,561	11.4	
2	경 덕	238,682	11,328	4.7	
3	계 룡	211,742	14,911	7.0	
4	대 성	652,953	9,485	1.5	
5	대 신	245,125	27,128	11.1	
6	대 운	163,181	7,068	4.3	
7	돈 운	57,697	24,036	41.7	
8	성 모	170,414	13,560	8.0	
9	동 준	161,743	602	0.4	
10	명 신	58,642	2,907	5.0	
11	석 봉	296,822	11,407	3.8	
12	신 일	239,089	33,221	13.9	
13	우 송	304,555	40,970	13.5	
14	유 명	194,130	51,166	26.4	
15	한 빛	76,026	2,033	2.7	
16	해 광	144,211	19,633	13.6	
17	이 문	270,317	9,173	3.4	
18	행 촌	280,762	60,192	21.4	
19	혜 정	226,257	366	0.2	
20	동 방	266,761	36,348	13.6	
21	호수돈	289,432	35,711	12.3	
계		4,676,657	425,806	9.1	

[표 4] 법인세 환급 및 기부금 유치 현황(3개년 평균)

(단위 : 천원)

	법인명	법인세 환급 평균액	학교 전출액	전출률(%)	기부금 유치액
1	경 금	8,586	8,193	95	
2	경 덕	3,860	3,860	100	
3	계 룡	3,717	3,717	100	
4	대 성	9,625	9,625	100	
5	대 신	567	567	100	514,266
6	대 운	1,002	1,022	100	15,908
7	돈 운	1,351	1,351	100	
8	성 모	2,596	704	27	7,000
9	동 준	973	708	73	5,034
10	명 신	-	-	0	
11	석 봉	1,628	1,628	100	133,340
12	신 일	1,551	1,551	100	
13	우 송	2,615	2,615	100	
14	유 명	11,808	11,808	100	3,347
15	한 빛	59	59	100	127,210
16	해 광	1,072	419	39	
17	이 문	1,956	1,956	100	
18	행 춘	11,680	11,680	100	
19	혜 정	64	64	100	2,528
20	동 방	6,611	6,611	100	
21	호수돈	8,152	8,152	100	
계		79,493	76,290	96	808,633

[표 5]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법인 부담 현황(3개년 평균)

(단위 : 천원)

	법인명	사업비 총액	법인부담액	부담률(%)	비고
1	경 금	2,415,761	1,345,761	56	
2	경 덕	303,308	-	0	
3	계 룡	-	-	-	
4	대 성	7,515,318	1,480,341	20	
5	대 신	2,533,800	1,533,800	61	
6	대 운	-	-	-	
7	돈 운	-	-	-	
8	성 모	-	-	-	
9	동 준	-	-	-	
10	명 신	-	-	-	
11	석 봉	1,333,400	133,340	10	
12	신 일	-	-	-	
13	우 송	-	-	-	
14	유 명	912,639	244,669	27	
15	한 빛	1,322,343	46,000	3	
16	해 광	452,949	26,182	6	
17	이 문	1,378,386	-	0	
18	행 촌	-	-	-	
19	혜 정	208,028	2,528	1	
20	동 방	132,236	46,238	35	
21	호수돈	128,207	34,607	27	
계		18,636,375	4,893,466	26	

[표 6] 공납금 징수율 및 구내재산 임대 입찰 현황(3개년 평균)

(단위 : 천원)

	법인명	공납금 징수율	입찰대상건수	공개경쟁입찰	경쟁입찰율
1	경 금	99.83	3	1	33.3%
2	경 덕	99.36			
3	계 룡	99.84			
4	대 성	99.94	5	2	40.0%
5	대 신	99.89	1	0	0.0%
6	대 운	99.58	1	1	100.0%
7	돈 운	99.60	2	0	0.0%
8	성 모	99.32	1	0	0.0%
9	동 준	99.77	1	1	100.0%
10	명 신	98.00			
11	석 봉	99.83	6	1	16.7%
12	신 일	99.10			
13	우 송	99.80			
14	유 명	100.00	1	0	0.0%
15	한 빛	99.47	2	0	0.0%
16	해 광	99.80			
17	이 문	99.40			
18	행 촌	99.95	3	0	0.0%
19	혜 정	99.90	1	0	0.0%
20	동 방	99.94	4	4	100.0%
21	호수돈	99.65	2	2	100.0%
계		99.62	33	12	36.4%

[표 7] 교사 공개전형 및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법인명	임용교원수	공개전형수	공개채용률	심의대상수	심의건수
1	경 금	2	2	100	1	1
2	경 덕	1(교육청위탁)	1	100	2	1
3	계 룡				2	0
4	대 성	14(1명교육청위탁)	14	100	28	21
5	대 신	3	3	100	1	1
6	대 운	4	4	100	1	1
7	돈 운	1	1	100	1	
8	성 모	11	3	27	3	1
9	동 준				1	0
10	명 신				2	1
11	석 봉					
12	신 일				5	
13	우 송	15	15	100	3	2
14	유 명	1	1	100	1	1
15	한 빛	6	6	100	3	
16	해 광	3	3	100	2	2
17	이 문				2	
18	행 촌	12	12	100	5	1
19	혜 정				3	
20	동 방	4	4	100	3	3
21	호수돈	6(1명교육청위탁)	6	100	19	1
계		83(3명교육청위탁)	75	90.4	88	37

#### 10. 학교급식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비율(83.7%)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

- 지난 11월 25일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부자감세 여파로 인한 급식관리 예산 삭감 비율(83.7%)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대전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있다.
- 교육비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 밥상공동체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에 있어서 학교급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족한 운동량으로 성장기 비만 아동이 1/3 수준이며 환경호르몬의 범람 등으로 여자 아이들이 조기 생리가 일어난다. 또한 남자아이들은 정자 수 감소와 운동성이 부실하다. 전체 아동의 25%가 아토피에 걸려 있으며 기타 천식과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급증하여 아이들 2/3가 하체근육이 부실하고 체력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2008년도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식품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은 학교의 일반농산물 구입을 우수농산물 대체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115개에 22억3백만원을 지원하여 32억8천만원의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하였다. 이는 지원액의 137%에 해당하는 구매액이다. 만약 조례에 따라 식품비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350%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포함하여 150억원의 친환경농산물이 구입되어야 한다.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역할
  -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의 친환경식품 구매 가이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 보육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로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단계별 확대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하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초등학교 친환경농산물 구입 현황을 전면 점검 및 철저한 행정지도
  -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올바른 운영체계 확립
  - 영양교사,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실시
  -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원 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망 - 유통망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의 역할
  - 우수농산물 지원액 포함 실질적인 친환경농산물 체계적인 구입 계획 확립

-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참고자료]

부자감세 여파, 교육시설개선/급식관리 예산 삭감  
-16개시도 교육청 '10년 세출 예산안 분석 중에서-

[권영길의원실 발표, 정책보고서, 2009. 11. 25]

(정책)보건/급식/체육활동-(단위)급식관리					
(단위:천원)					
분류	단위사업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서울	급식관리	61,954,383	48,634,860	△13,319,523	△21.5
부산	급식관리	8,770,442	13,239,309	4,468,867	51
대구	급식관리	35,130,089	22,334,694	△12,795,395	△36.4
인천	급식관리	31,691,518	29,646,723	△2,044,795	△6.5
광주	급식관리	15,068,887	18,615,423	3,546,536	23.5
대전	급식관리	6,902,371	1,121,810	△5,780,561	△83.7
울산	급식관리	4,611,729	3,325,340	△1,286,389	△27.9
경기	급식관리	56,607,603	122,479,136	65,871,533	116.4
강원	급식관리	23,761,306	25,495,021	1,733,715	7.3
충북	급식관리	14,479,332	11,714,598	△2,764,734	△19.1
충남	급식관리	20,070,615	7,061,851	△13,008,764	△64.8
전북	급식관리	24,759,332	18,114,376	△6,644,956	△26.8
전남	급식관리	40,861,723	43,673,213	2,811,490	6.9
경북	급식관리	14,076,527	13,478,074	△598,453	△4.3
경남	급식관리	38,341,508	34,573,835	△3,767,673	△9.8
제주	급식관리	16,907,565	3,866,660	△13,040,905	△77.1
합계	급식관리	413,994,930	417,374,923	3,379,993	0.8

※ 급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기구교체, 학교급식시설 예산 및 식품비 지원 등의 관련 예산

- 증가한 지역(5): 78,432,141천원 증가/09년 대비 54.1% 증가
- 감소한 지역(11): 75,052,148천원 감소/09년 대비 27.9% 감소